



정부, 울산·경북·경남 산불 대응 중대본 5차 회의 개최

- 경북 산불 확산으로 인명피해 발생, 진화역량 총결집해 인명보호 최우선 추진

-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3월 26일(수) 9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울산·경북·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*를 개최했다.
 - * 행안부, 산림청, 소방청, 경찰청, 기상청, 국조실, 기재부, 교육부, 과기부, 법무부, 국방부, 문체부, 농식품부, 산업부, 복지부, 환경부, 고용부, 국토부, 중기부, 국가유산청, 한국전력공사, 한국도로공사, 17개 시·도 참석
-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주민 대피 상황, 산불대응 총괄 상황,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.
- 지난 22일에 발생한 경북 의성산불은 어제 오후부터 불어온 강한 서풍으로 인해 안동, 청송, 영양, 영덕 등 동쪽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.
 - 의성·안동 산불로 인해 3.26일 07시 현재 경북에서 14명의 사망자*가 발생했고 산림 약 15,158ha, 주택 등 145동의 시설 피해를 입었다.
 - * 안동 2, 청송 3, 영양 4, 영덕 5
- 정부는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·장비·인력을 집중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,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 발효되는 악조건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 - 이에, 산림청은 지난 22일 12개 시·도에 발령한 산불경보 ‘심각’ 단계를 어제 16시부로 전국으로 확대했고,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했다.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하여 기동대를 추가 지원했다.

- 경북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의성, 안동, 청송 등 지역주민 약 23,000명은 관내 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로 긴급히 대피했다.
 - 산림청은 민가, 병원 등 인명피해 우려시설을 중심으로 고성능 산불진화차 20대를 동원하여 지연제 45톤을 살포하고 있다.
- 국방부는 산림청·소방청 등 유관기관 산불진화 헬기의 항공유류(206회, 401,893리터)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.
-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“유례없이 빠른 산불 확산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”이라며,
 - “정부는 모든 기관이 진화역량을 결집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<총괄> |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| 책임자 | 과 장 | 신강민 (044-200-2346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민규 (044-200-2634) |
| <공동> |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 | 책임자 | 과 장 | 안길주 (044-205-6170) 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| 유호석 (044-205-6183) |
| <공동> | 산림청 산불방지과 | 책임자 | 과 장 | 금시훈 (042-481-425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유기원 (042-481-4251) |